

헌 법

1.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으로서의 명칭을 사용하고 정치활동을 하며 당헌에 따라 계속적인 조직을 두고 있는 등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결사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 ② 정당은 직접 헌법규정에 따라 결성된 조직체이며, 집권정당의 의사는 곧 국가의사를 의미하므로 정당은 헌법기관이다.
- ③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경우 당헌이 정하는 절차 외에도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그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 ⑤ 헌법재판소는 정당에 대한 해산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정당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 재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2. 평등원칙 및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보 기>

- ㄱ. 행위규범으로서의 평등원칙은 입법자에게 객관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범의 대상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ㄴ. 헌법재판소가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따라 비례심사를 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따라 자의심사를 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 ㄷ.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로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규정하면서도 직계비속을 제외하는 민법 규정에 대한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 ㄹ. 자의심사의 경우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지만 심사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비교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적(차별목적)의 발견·확인에 그친다.
- ㅁ.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심사척도에 따라 비례원칙 위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ㄷ, ㅁ
- ⑤ ㄹ, ㅁ

3.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에게 특정의 공무수행기능을 위임하는 위임행위이다.
- ②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 ③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한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 ④ 당선소송은 선거의 일부 무효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 ⑤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보 기>

- ㄱ. 정부는 법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정부가 대법원의 세출예산요구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진행할 수 있게 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3 규정은 회사정리법상의 법원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금융기관의 의사에 따르지 않게 수 없게 하여 사법권 독립에 위협의 소지가 될 수 있다.
- ㄷ.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에 법관을 포함시켜 법관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제106조 제1항의 법관의 신분보장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ㄹ.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ㅁ. 형법 제332조는 상습절도범에 대하여 그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또 다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그 형의 하한선을 3년 이상으로 묶고, 또 형법상에 처벌규정이 없는 미수범까지 그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ㄴ, ㅁ
- ④ ㄷ, ㄹ
- ⑤ ㄷ, ㅁ

5. 헌법에 임기가 6년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가기관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감사원장	ㄴ. 법관
ㄷ. 대법관	ㄹ. 대법원장
ㅁ. 헌법재판소 재판관	ㅂ. 헌법재판소장
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ㅂ
 ③ ㄱ, ㄹ, ㅂ ④ ㄴ, ㄹ, ㅅ
 ⑤ ㅁ, ㅂ, ㅅ

6.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노동3권은 사회권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는 입법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로 나타난다.
 ② 노동3권은 자유권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는 헌법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④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단결권의 주체는 단지 개인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근로자 개인뿐만이 아니라 단체 자체의 단결권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공무원인 근로자 중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3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7.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여·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증여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등기에 대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입법자가 골프장을 스키장 및 승마장보다 사치성 재산이라고 보아 중과세하고 있는 것은 정책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 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이혼을 사유로 한 재산분할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그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8. 다음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적법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출석요구에 불응한 증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② 인터넷 언론사가 대선예비주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데 대하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 공문을 보내자 당해 언론사가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③ 사전심의를 받은 방송광고에 한하여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게 된 광고주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④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하여 더 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시행되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신문의 독자가 알 권리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⑤ 배아를 임신 목적뿐만 아니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 시행되자 산부인과 의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9.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만 6세가 되기 전에 앞당겨서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상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②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의 부담금을 개발사업지역내 주택의 수분양자들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③ 무상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는 법률에서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기 전에는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④ 자녀의 교육은 헌법상 부모와 국가에 공동으로 부과된 과제이므로 부모와 국가의 상호연관적인 협력관계를 필요로 한다.
 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의무교육 관련 경비를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부담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

10. 역대 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헌헌법에서는 심의기관인 국무원을 두었으며, 대통령이 국무원의 의장이었다.
 ② 제헌헌법에서는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헌법위원회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탄핵재판소를 따로 규정하였다.
 ③ 1960년 6월의 제3차 개정헌법 하에서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되었으며, 의결기관인 국무원을 두었고 국무총리가 국무원의 의장이었으며, 국무원은 민의원 해산권을 가지고 있었다.
 ④ 1962년의 제5차 개헌은 국회의 의결없이 국가재헌최고회의가 의결하였으며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 이것은 제2공화국 헌법의 헌법개정절차에 따른 개정이 아니었다.
 ⑤ 1962년의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후보에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당적이탈·변경 또는 정당 해산 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했다.

1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개를 원치 않을 사항을 말한다.
- ② 변호사의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게 하는 것은 변호사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③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는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라 볼 것이다.
- ④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 때 '자신에 관한 정보'는 그 자체가 꼭 비밀성이 있는 정보일 필요는 없다.
- ⑤ 개별 의료급여수급기관으로 하여금 수급권자의 진료정보를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줄 의무를 규정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2.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간신문과 뉴스통신·방송사업의 겸영을 금지하는 신문법 제15조 제2항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
- ② 일간신문사 지배주주의 뉴스통신사 또는 다른 일간신문사 주식·지분의 소유·취득을 제한하는 신문법 제15조 제3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 ③ 1개 일간신문사의 시장점유율 30%, 3개 일간신문사의 시장점유율 60% 이상인 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신문법 제17조는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신문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④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는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 ⑤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으로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도록 규정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은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13.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② 권한쟁의의 결정은 재판관 7인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현행법에는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당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 ④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국회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평행위를 하는 경우 국회부의장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14.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① 학교정화구역 내 극장영업금지를 규정한 학교보건법 제6조는 극장영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제한하나 예술의 자유는 간접적으로 제약되고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를 참작하여 볼 때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가장 큰 주된 기본권은 직업의 자유이므로 직업의 자유 침해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예술의 자유 침해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 ②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는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함께 제한한다. 양심의 자유는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양심뿐만 아니라 비종교적 양심도 포괄하는 기본권이고 종교의 자유는 종교적 신념만을 보호하여 종교의 자유가 특별한 기본권이므로 종교의 자유를 중심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한다.
- ③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수락권이 충돌하는 경우 두 기본권 모두 효력을 나타내는 규범조화적 해석에 따라 기본권 충돌은 해결되어야 한다.
- ④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 후자가 전자보다 중시된다.
- ⑤ 흡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흡연권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15.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국가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급부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헌법재판소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보장수준으로 보고 있다.
- ② 국민연금법 제52조가 수급권자에게 2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일정한 경우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므로 공직선거법에서 확장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제한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의 정당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 ④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간 합산과세는 자산소득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단위별 담세력에 부합하는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가 있다.
- ⑤ 현대국가에서 조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은 국민이 공동의 목표에 삼고 있는 일정한 방향으로 국가사회를 유도하고 그러한 상태를 형성하기 위한 기능을 의미하고 이같은 기능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헌법적 정당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16.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외에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③ 국회의 입법 또는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의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그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 ④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 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17. 국회의 자율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보 기> —

- ㄱ.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의 지위에 비추어, 개별적인 수정안에 대한 평가와 그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판단은 명백히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 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그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제로 사임시킨 행위는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ㄷ. 국회의원의 질의권, 토론권 및 표결권 등은 국회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아니므로 국회의원들은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ㄹ.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헌법 제64조와 같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나,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8.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한다.
- ②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의료지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의료지시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 추정은 주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환자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 대하여 한 의사표현, 타인에 대한 치료를 보고 환자가 보인 반응, 환자의 종교, 평소의 생활태도 등을 통해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
- ④ 환자 측이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진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료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은 의료인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19.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제청법원은 합헌결정의 기속력 때문에 합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대해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 심급에서 다시 제청할 수 없다.
- ②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범위는 실제적인 형벌법규에 한정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이나 법원조직법 등 절차법에는 동 조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변형결정의 하나인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도 위헌결정과 동일하게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20. 헌법상 기본적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기본적 의무에 관한 헌법규정은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을 구속할 수 있는 직접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 ② 근로의 의무는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된다.
- ③ 헌법 제39조 제2항의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처우에는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까지 포함한다.
- ④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는 헌법상의 의무로서, 입법형성권의 행사에 의해 현실적인 의무로 구체화된다.
- ⑤ 과세조건, 즉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은 법률로 규정해야 하지만 조세의 부과나 징수절차까지 법률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21.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정감사의 실시기간은 20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②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 ③ 국정감사 및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국정감사 및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2. 조약의 헌법적 규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보 기>

- ㄱ.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어업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ㄴ. 특정의 외국 농산물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과의 합의는 헌법 제6조 제1항의 조약에 해당하므로 조약 공포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 ㄷ.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내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가중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 ㄹ.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제1항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은 국회의 관여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23. <보기>는 헌법 제26조가 보장하고 있는 청원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O) 그름(X)을 맞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보 기>

- ㄱ.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ㄴ. 국민이면 누구든지 널리 제기할 수 있는 민중적 청원제도는 재판청구권 및 기타 군사법적 구제청구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국가기관이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충분하며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ㄷ. 적법한 청원에 대해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 이고 이러한 통보조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ㄹ.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은 각각 국회와 지방의회에 청원할 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규정은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ㄱ	ㄴ	ㄷ	ㄹ
① X	O	O	O
② O	X	O	O
③ O	O	X	O
④ O	O	X	X
⑤ O	X	X	X

24.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제청 또는 심판청구된 법률조항이 법원의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결정되더라도 간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법원이 행하는 증거채부결정은 당해 소송사건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재판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헌법률심판의 재판의 전제성 개념에서 말하는 재판이라 할 수 있다.
- ④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기보다는 되도록 이에 관한 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그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 헌법재판소는 직권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다.
- ⑤ 공소장에 적시되지 아니한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실제 적용한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25.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① ‘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법률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이 건전한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는 이상 죄형법정주의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②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라는 표현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구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 용에 제공’한다는 법규정은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행위가 어떤 것일지는 법률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고 국민들로서는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어떠한 행위가 허용되는지를 알 수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④ 금지되는 직업소개의 대상을 ‘공중도덕상 유해’라는 기준에 맞추어 특정하거나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라는 법규정은 범죄의 중합 정도나 고의성 여부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행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